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9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02

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동아일보 정윤철 기자

03

"5년간 체육대회 안전사고 1천668건...대통령배 대회도 관리미흡"

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04

민형배 의원,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시사종합신문 오승택 기자

05

경기 중 폭력 사태... 생활체육 축구장 '아수라장'

한국생활체육뉴스 김문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01

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2025-10-23 08:00

로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샅으로 때렸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 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

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불복…법원에 가처분 신청

동아일보 정윤철 기자

2025-10-20 19:16

사진=동아일보DB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성남시청 감독)가 빙상연맹의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사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는 이사직 및 경기력향상위원직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김 이사는 8월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논란이 돼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 이사는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던 2019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10조 11항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퇴촌 조치한 연맹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는 잘못을 범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 이사의 징계 이력은 그가 빙상연맹 이사직과 경향위원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느냐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빙상연맹 정관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빙상연맹은 1일 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연맹 총회에서 김 이사를 임원으로 선임할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 이사에게 정관 상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김 이사에게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 자진 사임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이사는 연맹의 사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이사는 10일 연맹 사무처로 보낸 e메일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면서 “현시점에서의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이사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즉시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빙상연맹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선수들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로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작 연맹은 내홍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빙상연맹의 운영 실태와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년간 체육대회 안전사고 1천668건…대통령배 대회도 관리미흡"

연합뉴스 객민서 기자

2025-10-27 06:00

사진=박정하 의원실

최근 5년간 1천600건이 넘는 체육대회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천6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상이 1천316건, 응급 이송 306건, 수술 18건 등이었고, 사망사고도 3건 있었다.

대통령배·국무총리배·장관배 등 정부 명칭 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도 35건 있었다. 이 가운데 복싱·씨름·철인 3종·태권도 등 부상 위험이 큰 5개 대회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1개 대회에서는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행사 주최자는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부 명칭 대회에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2023년 7월 대회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3개 종목단체에 종목별 안전매뉴얼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21개 단체는 이날까지 관련 매뉴얼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부 명칭 대회조차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성과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대회의 안전 관리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대회의 성과 평가에서 안전관리 지표를 강화해 대회 참가 선수 및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시사종합신문 오승택 기자

2025-10-27 08:33

사진=시사종합신문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중 5곳 중 1곳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한장애인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기준 전국 35개 반다비체육센터 중 7곳(20%)은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 이상 걸리는 곳은 22곳(63%), 30분 미만에 접근 가능한 시설은 6곳(17%)에 불과했다. 소요시간은 각 센터가 위치한 시·군·구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주민센터를 출발지로 설정해 측정했다.

셔틀버스를 운영 중인 곳은 경남 양산시 1곳뿐이었다. 양산시는 장애인체육회 기금 1억 2천만 원과 시비 1억 7천만 원 등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차공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이 절반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 센터 관리·운영 지침(2023)’은 ‘전체 주차면수의 30% 이상 또는 최소 20면 이상을 장애인 전용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2월 발간한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개 센터 중 권장 기준을 충족한 곳은 7곳(46%)에 불과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의 상징인 반다비체육센터가 정작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면 물리적 접근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셔틀버스 보급과 주차공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에게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생활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103개소를 선정해 35개소를 개관했다.

경기 중 폭력 사태… 생활체육 축구장 ‘아수라장’

한국생활체육뉴스 김문상 기자

2025.09.23 10:12

사진=한국생활체육뉴스

충북 진천에서 열린 생활체육 축구 경기 도중 선수 간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외부인까지 경기장에 난입하는 등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을 담은 영상이 퍼지며 생활체육의 근본 가치인 ‘스포츠맨십’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14일 진천에서 열린 충북생활체육대회 장년부 축구 4강전. 전반 38분, 청주시 선수의 공격을 단양군 선수가 반칙으로 막아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곧바로 몸싸움과 주먹질이 오갔고, 일부 선수들이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특히 선수뿐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평상복 차림의 외부인들까지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흥분한 선수들은 심판 판정 이후에도 거친 항의를 이어가며 경기 질서를 무너뜨렸다.

심판진은 양측 선수에게 퇴장을 선언했으나, 곧 고의적 보복 행위를 이유로 단양군 6번 선수만 퇴장시키는 것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와 관중들은 “경기 외적인 상황이 통제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경기는 2대 1로 청주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부를 떠나 상대 존중과 페어플레이라는 스포츠의 기본 가치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못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관련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회 수 1만 건을 돌파하며 “생활체육 수준이 개탄스럽다”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축구협회는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진상 조사를 마친 뒤 조속히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생활체육의 기본은 경쟁이 아닌 화합이다. 이번 사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성숙한 스포츠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